

의안번호	제 2025 - 15호
의 결 연 월 일	2025. 5. 12. (제138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위원회 개관	1
1. 설립배경 및 연혁	1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6
3. 조직	6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8
II. 제9기 양형위원회 활동 결과	9
1.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9
2. 제9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9
3. 제9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10
III. 제10기 양형위원회 구성	38
1. 양형위원	38
2. 전문위원	39
3. 자문위원	40
IV. 2025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41
1. 양형기준 설정·수정 지원 및 각종 책자 발간	41
2. 양형연구회 활성화	42
3.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콘텐츠 추가 제작	44
4. 新양형기준시스템 운영	45
5. 강의 및 교육	46
6. 외국 양형위원회·사법부와의 교류 및 해외 홍보	46
V. 2023년 선고 판결 양형기준 준수율	48

I. 양형위원회 개관

1. 설립배경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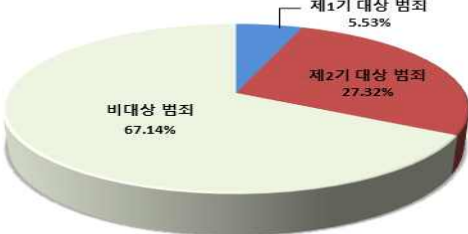
가. 설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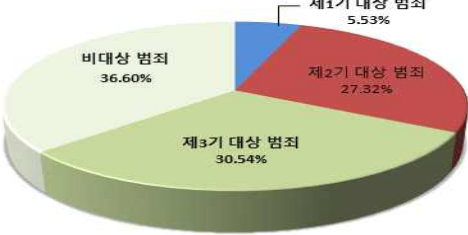
- 2004. 12. 사법개혁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 건의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07. 1. 26.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 개정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
 -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
 - 2009. 4. 26.까지 최초 양형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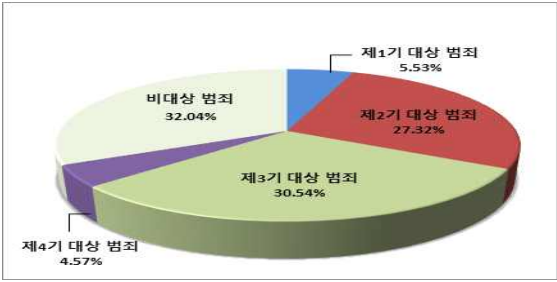
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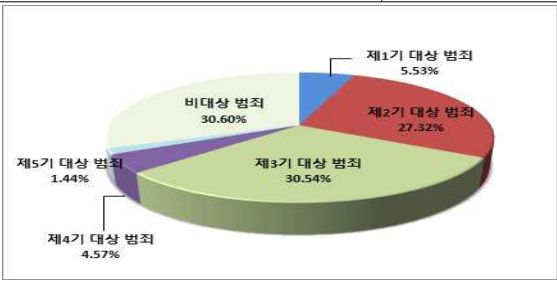
-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2007. 4. 27. 시행되어 같은 날 양형위원회 출범
- 출범 이후 활동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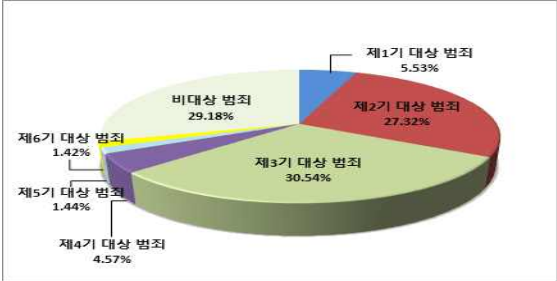
【1기 양형위원회】	- 2007. 4. 27. ~ 2009. 4. 26. - 위원장 김석수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	• 2009. 4. 24. 최종 의결 • 2009. 7. 1.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1기 대상 범죄 5.53%</p> <p>비대상 범죄 94.47%</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5.5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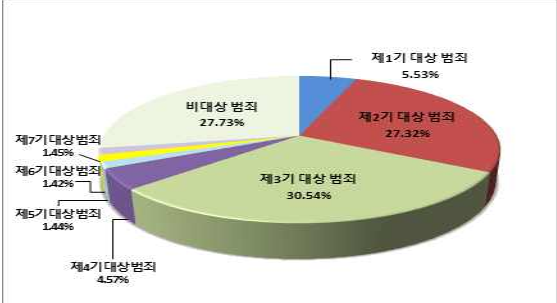
【2기 양형위원회】		- 2009. 4. 27. ~ 2011. 4. 26. - 위원장 이규홍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0. 6. 29. 의결 • 2010. 7. 15. 시행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 2011. 3. 21. 의결 • 2011. 7. 1. 시행
-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1. 3. 21. 의결 • 2011. 4. 15.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1기 대상 범죄 5.53%</p> <p>제2기 대상 범죄 27.32%</p> <p>비대상 범죄 67.14%</p> </div>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32.8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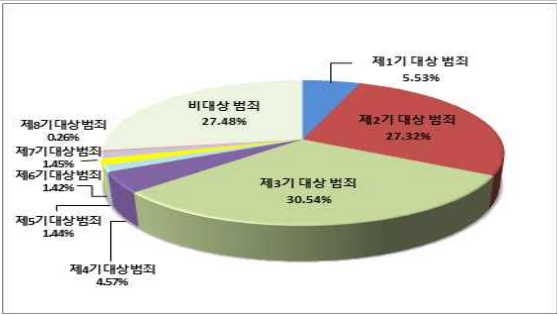
【3기 양형위원회】		- 2011. 4. 27. ~ 2013. 4. 26. - 위원장 이기수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2. 1. 30. 의결 • 2012. 3. 16. 시행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 2012. 6. 18. 의결 • 2012. 7. 1. 시행
- 선거범죄 양형기준		• 2012. 8. 20. 의결 • 2012. 9. 1. 시행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 2013. 2. 4. 의결 • 2013. 7. 1. 시행
- 살인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3. 4. 22. 의결 • 2013. 5. 15. 살인범죄 시행 • 2013. 6. 19. 성범죄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1기 대상 범죄 5.53%</p> <p>제2기 대상 범죄 27.32%</p> <p>제3기 대상 범죄 30.54%</p> <p>비대상 범죄 36.60%</p> </div>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63.4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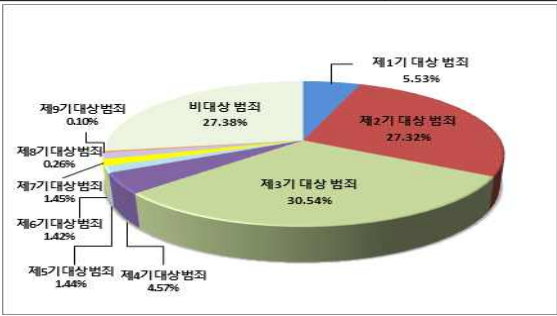
<div>【4기 양형위원회】</div> <div>- 2013. 4. 27. ~ 2015. 4. 26.</div> <div>- 위원장 전호숙</div>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2014. 3. 31. 의결 • 2014. 7. 1. 시행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 수정 양형기준 시행 : 2014. 10. 1.)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 2015. 2. 2. 의결 • 2015. 7. 1. 시행
-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5. 4. 13. 의결 • 2015. 5. 15. 시행
<div>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67.96%</p> </div>	

<div>【5기 양형위원회】</div> <div>- 2015. 4. 27. ~ 2017. 4. 26.</div> <div>- 위원장 이진강</div>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3. 28. 의결 • 2016. 5. 15. 시행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 2016. 3. 28. 의결 • 2016. 7. 1. 시행
-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7. 11. 의결 • 2016. 9. 15. 시행
-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12. 5. 의결 • 2017. 1. 15. 시행
-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7. 4. 10. 의결 • 2017. 5. 15. 시행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2017. 4. 10. 의결 • 2017. 7. 1. 시행
<div>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69.40%</p> </div>	

【6기 양형위원회】		- 2017. 4. 27. ~ 2019. 4. 26. - 위원장 정성진
-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8. 6. 11. 의결 • 2018. 8. 15. 시행
-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8. 7. 23. 의결 • 2018. 8. 15. 시행
-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2019. 3. 25. 의결 • 2019. 7. 1. 시행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70.82%</p>		

【7기 양형위원회】		- 2019. 4. 27. ~ 2021. 4. 26. - 위원장 김영란
-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1. 6. 의결 • 2020. 2. 1. 시행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4. 20. 의결 • 2020. 7. 1. 시행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 2020. 5. 18. 의결 • 2020. 7. 1. 시행
- 마약, 강도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9. 14. 의결 • 2020. 10. 15. 시행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2020. 12. 7. 의결 • 2021. 1. 1. 시행
-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1. 3. 29. 의결 • 2021. 7. 1. 시행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72.27%</p>		

【8기 양형위원회】		- 2021. 4. 27. ~ 2023. 4. 26. - 위원장 김영란
-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 기준		• 2021. 12. 6. 의결 • 2022. 3. 1. 시행
-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2. 3. 28. 의결 • 2022. 6. 1. 시행(아동학대범죄)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2. 7. 4. 의결 • 2022. 10. 1. 시행
-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 2023. 4. 24. 의결 • 2023. 7. 1. 시행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벌금형 양형기준 포함)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72.52%</p> </div>		

【9기 양형위원회】		- 2023. 4. 27. ~ 2025. 4. 26. - 위원장 이상원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4. 3. 25. 의결 • 2024. 7. 1. 시행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벌금형 양형기준 포함)		
-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5. 3. 24. 의결 • 2025. 7. 1. 시행 예정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벌금형 양형기준 포함)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72.62%</p> </div>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의결기관
-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

3. 조직

가. 위원장 및 위원

- 대법원장이 위원장 1명과 위원 12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위원은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검사 2명은 법무부장관이 추천, 변호사 2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

나.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둠
-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최대 15명까지 둘 수 있으며, 임기 2년(연임 가능)
- 현재 법관 3명(수석전문위원 1명 포함),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군법무관 1명, 교수 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포함) 6명(총 14명)

다. 운영지원단

- 양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9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단 설치

- 운영지원단은 운영지원단장(판사)과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및 통계분석과로 구성
- 법원서기관 1명, 법원사무관 9명을 포함한 총 31명(양형자료분석관 포함)의 일반직원을 배치

라. 자문위원

-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교정기관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현재 14명)

마. 조직도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단 계		담당	내 용
1	양형자료 조사·분석	운영지원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확정기록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및 분석
↓			
2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3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			
4	공청회 및 의견조회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			
5	양형기준안 수정 및 양형기준 확정	위원회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하여 양형기준 확정
↓			
6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II. 제9기 양형위원회 활동 결과

1.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 2023. 4. 27. ~ 2025. 4. 26.

2. 제9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2025. 4. 26. 기준】

지위	성명	사법연수원 기수	비고
위원장	이 상 원	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법관)	김 대 응	19기	서울고등법원장
	윤 승 은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 환	27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상임위원)
	정 상 규	29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위원 (검사)	박 세 현	29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 희 도	31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 재 현	18기	변호사
	신 승 우	34기	변호사
위원 (교수)	강 수 진	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혜 경	해당 없음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 (학식·경험)	박 장 호	해당 없음	MBC 보도본부장
	백 범 석	해당 없음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3. 제9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가. 위원회 회의 등 개최

※ 양형위원 전체회의 16회, 공청회 2회, 심포지엄 4회, 전문위원 회의 15회, 자문위원 회의 2회 개최

(1) 양형위원 전체회의(16회)

차 수	일 시	안 건
124차	2023.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식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등
125차	2023.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기 양형기준 설정, 수정 대상범죄 등 선정
126차	2023.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127차	2023.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128차	2023.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128-1차	2023. 11. 21.	
129차	2024.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확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확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확정 제19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의결
129-1차	2024. 1. 18.	

차 수	일 시	안 건
130차	2024.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의결 ▪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3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131차	2024.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132차	2024. 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133차	2024.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134차	2024.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심의
135차	2024.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심의
136차	2025.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 양형기준안 각 의결 ▪ 제20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의결
137차	2025.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4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2)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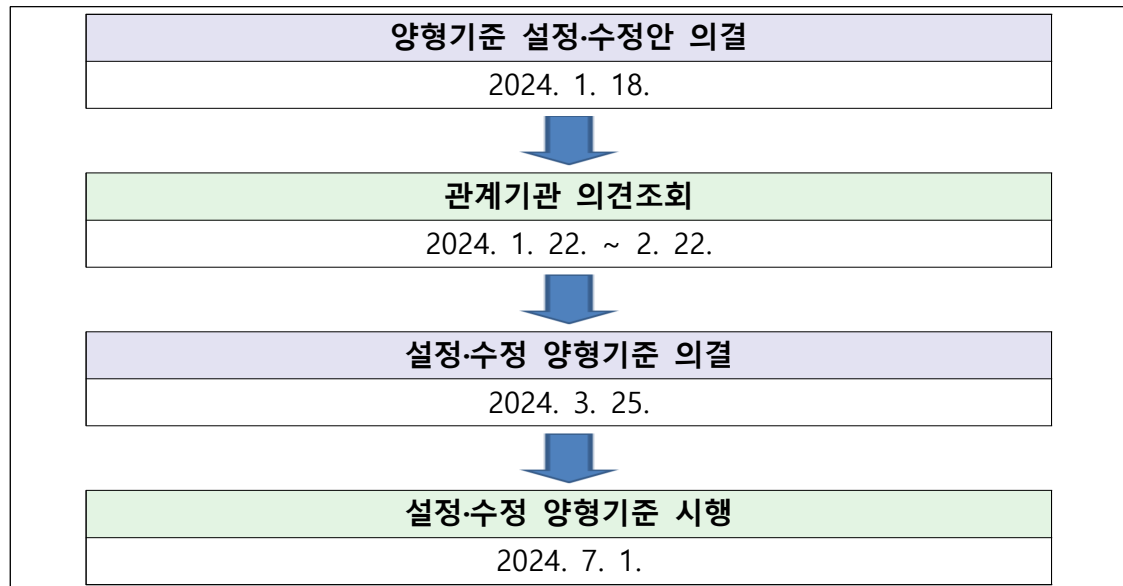
회 차	일 시	안 건
제19차 공청회	2024.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제20차 공청회	2025.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성범죄 양형기준안

(3) 심포지엄

명 칭	일 시	주 제
제10차 심포지엄	2023. 6. 26.	▪ AI와 양형
제11차 공동심포지엄	2023. 9. 7.	▪ 스토킹범죄와 양형
제12차 심포지엄	2024. 6. 24.	▪ 사기범죄와 양형
제13차 심포지엄	2024. 12. 2.	▪ 피해자와 양형

나. 제9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1) 경과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가) 설정대상 범죄

- 양형실무와 사건 증가 추이,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의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신설함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 등 위반범죄의 경우 법정형은 낮으나,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

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킴

(나)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

1. 스토킹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스토킹범죄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6월
2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한다).

2. 잠정조치 등 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긴급응급조치 위반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4월 - 8월, 200만 원 - 6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1,000만 원
2	잠정조치 위반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

-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1) 권고 형량범위

- 법정형, 형량분포,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및 규범적인 상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하고, 일반 스토킹범죄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함]

2) 형종 선택의 기준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예외적으로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설정
-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기본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술식 기준을 설정
- ‘처벌불원’의 정의규정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양형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그 정의규정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변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이사, 이직, 영업포기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

- 정의규정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것처럼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되, 혐오범죄가 특별가중사유가 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규정에 ‘혐오감’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스토킹범죄를 하는 경우도 포함

- 정의규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스토킹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를, 일반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을 각각 설정하고, ‘동종 전과’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사이버 스토킹) 및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범죄를 폭넓

게 포함시켜 해당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가중사유로 반영되도록 함

-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재범한 경우가 많고, 해당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하여 가중인자의 범위를 확대함
- ‘동종 전과’의 정의규정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스토킹범죄(대유형 1, 2),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 및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3)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명칭 및 유형 분류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
-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01¹ 등록권리 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 침해행위			

02¹ 저작권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 침해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03¹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2	국외침해			

04¹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설·도용			
2	국내침해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05¹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나) 권고 형량범위

-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기술침해범죄에 대하여 강화된 권고 형량범위 제시

-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범위를 상향함
 -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 제시함
 -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
- 기술보호 수단으로 기능하는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등록권리 침해행위의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함
- ※ 이하 삭제는 삭제선, 수정은 파란 글씨로 표시함

01¹ 등록권리 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 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4년

03¹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10월 6월 - 1년6월	8월 - 2년 10월 - 3년	1년 - 4년 2년 - 5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3년	1년 - 3년6월 1년6월 - 5년	2년 - 6년 3년 - 8년

04¹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설·도용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국내침해	8월 - 2년	1년 - 4년	2년6월 - 6년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1년 - 3년6월	2년 - 6년	4년 - 10년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2년 - 5년	3년 - 7년	5년 - 12년

(다)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 지식재산·기술침해 사건에서는 피해기술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액의 심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경우 침해자가 해당 연구개발비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기업의 투자·노력에 대한 부정취득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 정의규정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피해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피해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인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정의규정에 추가함
- 영업비밀(기술)은 거래처, 파견직원 등에 의해서도 유출되는데, 종전 정의규정이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관계기관 의견 반영
- 계약상 의무를 위배하여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가중하는 것이 타당하고, 열거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 확대

- 정의규정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피고인이 권리자(피해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피해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의 정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 피고인이 영업비밀(기술)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기술)이 반환·폐기되어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위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도록 함

-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고,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복제가 용이하므로 정의규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된 경우임을 명확히 함

- 정의규정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피해자)에게 반환·폐기되어, 권리자(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감경인자 ‘자수’를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수정하여 암수 범죄 적발 및 추가 피해 방지 유도

- 범죄 가담자 협조를 위해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등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양형인자를 수정

- 특별감경인자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함
 - 지식재산범죄의 침해판단이 어려운 특성과 더불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행위불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실무에서도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라) 집행유예 기준 강화

-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대유형 3, 4)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함
-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 집행유예 기준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제2, 3, 4유형)’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여, 국내침해(제2유형) 및 국외침해(제3, 4유형) 유형에서 집행유예가 제한되도록 규정
-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함

(4)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양형 강화

-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02¹ 매매·알선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2	대마	1년 - 3년	2년 - 5년	4년 - 7년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마약, 향정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2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10년	8년 - 13년	10년 이상, 무기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 최근 마약류 확산과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 상향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나) 대량범에 대한 양형 강화

-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하여, 대량범(대유형 4)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대량범(대유형 4)에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 구간(제4유형)을 신설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04 ¹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9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7년	5년 - 9년 6년 - 10년	7년 - 11년 8년 - 13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15년
4	제4유형	8년 - 12년	10년 - 15년	13년 이상, 무기

- 대량범(대유형 4)은 마약의 종류 및 가액에 따라 제1, 2, 3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3유형(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최근 단일 사건으로 적발되는 밀수 마약류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있으며, 마약류 압수량도 증가 추세인 점 등을 반영, 대량범의 형량구간을 신설

- 양형 사례 분석 결과, 대량범의 제3유형에서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높은 형량 선고 추세 → 이에 대유형 4(대량범)의 제3유형을 나누어,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제4유형)

※ 10억 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1회 투약 분량 0.03g)

(다) 대마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 대마 수출입죄는 3-2유형에서 3-3유형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종전 ‘감경 1년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6년’에서 ‘감경 2년6월 - 6년, 기본 5년 - 8년, 가중 7년 - 10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대폭 상향됨
- 대마 투약·단순소지죄(1-2유형)의 가중영역도 ‘10월 - 2년’에서 ‘1년 - 3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됨

03¹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2년	10월 - 2년 1년 - 3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2	대마 제조 , 향정 다.목	1년 - 3년 10월 - 2년	2년 - 4년 1년 - 3년6월	3년 - 6년 2년 - 5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2년6월 - 5년 6년	4년 - 7년 5년 - 8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6년	7년 - 11년 8년 - 12년	9년 - 14년 10년 이상 무기

(라) 양형인자 정비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
규정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및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 투약, 제공하거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도 ‘범
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정의규정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대유형 2(매매·알선 등) 및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최근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매매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온라인의 익명성, 접근
용이성으로 마약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점, ‘강남 학원가 마약음
료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제공도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 등 참작
- 정의규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대량범(대유형 4)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대유형 1, 2, 3)에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
 - 마약류는 수량 및 가액에 따라 죄질에 차이가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의 경우는 대유형 4(대량범)에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취급한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함을 반영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정의규정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대량범(대유형 4)에서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
 - 대유형 4의 제1, 3유형에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영업범)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
- 수출입·제조 등(대유형 3)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
 - 일반 매매·알선 등(대유형 2-가)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것과 균형
 -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해당 인자 적용을 엄격히 함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

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 중유형 나)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가중인자 추가

(5)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정비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에서 위 문구를 삭제하기로 함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함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정의규정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스토킹범죄 정의규정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제9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1) 경과



(2)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가) 설정대상 범죄

-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동물보호법 §97 ① 1호	§ 10 ① 1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 , 3,000만 원 ↓
	§ 10 ① 2호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10 ① 3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10 ①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 97 ① 2호	§ 10 ③ 2호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10 ④ 3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 97 ② 1호	§ 10 ② 1호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 2,000만 원 ↓
	§ 10 ② 2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10 ② 3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10 ②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 97 ② 3호	§ 10 ④ 2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97 ⑥	§ 97 ① ~ ⑤	상습적으로 위 각 죄를 지은 경우	위 각 형의 1/2 까지 가중

-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제10조 제2항), 제3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각 행위의 상습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위 각 형의 1/2까지 가중]

(나)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

-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법정형, 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벌금형 포함)
- 각 유형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됨
-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서는 양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경·기본·가중영역 전체에서 벌금형 및 자유형에 관한 형량범위를 권고함.

다만 법관이 법정형, 불법과 책임의 정도 등 당해 범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양형을 가능하게 함

-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보호범위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까지 이르러 상당히 넓은 점, 동법의 구성요건상 범죄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형량범위 정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3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2,000만 원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월, - 500만 원	2월 - 10월, 100만 원 - 1,000만 원	4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다)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양형실무, 유사범죄군 등을 반영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
- 범죄의 보호법익, 형사정책적 요청 등을 고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설정하고,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중한 상해(2유형)’를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
- 상해 등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형인자로 설정함

- 특별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의규정에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을 추가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타인 소유 외의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동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소유이거나 무주(無主)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켰다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3)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설정 범위

- 기존 설정 범죄에 더하여, 다음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공갈 제외)를 행한 자 /정의(제2조 제2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병과 가능)
	제15조의2 제3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9조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제11조 제1항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병과 가능)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병과 가능)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정형이 상향되었는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 하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번 설정 대상에 포함함
-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으나, 사기와 공갈의 죄질과 범행방법이 다르고,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행위유형에서 공갈에 의한 범행은 제외함
 - 보험사기 범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현재 보험사기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설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일반사기 및 조직적 사기의 각 소유형 3(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과 소유형 4(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소유형 5(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기본 및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함
- 이에 따라 일반사기 소유형 5 및 조직적 사기 소유형 4의 가중영역 상한이 17년으로 상향되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적 사기 중 소유형 5의 가중영역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권고함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함. 형량범위를 특별조정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권고적 효력을 가진 양형기준의 적용원칙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다르게 됨]

- 형량범위 정리

01 |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9년	6년 - 9년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11년	8년 - 13년 17년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11년	8년 - 11년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5년	11년 이상, 무기

(다)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강화

-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함

-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
-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함
 -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하여 그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추가함
 -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한 것으로 당해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다른 공범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지는 아니함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삭제함
 -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에게 그것이 발생한 결과 자체로서 피고인의 양형책임을 가중하는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범죄성립 요건으로서의 책임과는 구별될 수 있음
-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
 -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함
- 조직적 사기의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추가함
-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함
 -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

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제한함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법정형의 상향(3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이에 따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유형 2)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함
 - 형량범위 정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6월 - 8월	4월 - 10월 1년	6월 - 1년2월 8월 - 2년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8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 - 4년

(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정비

-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범위를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으로 제한함으로써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의 적용범위를 축소함
-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추가함

(5)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설정 범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성폭력 처벌법	§ 11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3년 ↓, 3,000만↓
	§ 10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3년 ↓, 1,500만↓
형법	§ 303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7년 ↓, 3,000만↓

- 기존 설정 범죄에 더하여,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을 위해 ① 공중밀집장소 추행, ②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③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를 새로이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함

(나) 권고 형량범위

- 2018. 10. 16.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시행으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법정형이 상향(2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되었고, 2020. 5. 19. 같은 법의 개정·시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법정형도 상향(1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됨
-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 중유형 나.에 소유형 1로 추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중밀집장소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12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3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3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9년
56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성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 중유형 다.에 소유형 1, 2로 추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 10월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3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4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5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6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다) 양형인자

-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대유형 1, 중유형 나)의 양형인자표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의 경우 피해자의 특성, 구성요건 및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대유형 1, 중유형 다)의 양형인자표를 각각 공유함
- 행위태양,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윤간’, ‘임신’을 특별가중인자로,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을 일반가중인자로 각 설정함

(라) 성범죄군 전체의 공탁 관련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비

- 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함

Ⅲ. 제10기 양형위원회 구성

1. 양형위원

【2025. 4. 27. 현재】

지 위	성 명	기수/횟수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이 동 원	제17기	前) 대법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위원 (법관)	김 대 웅	제19기	서울고등법원장
	전 지 원	제24기	법원도서관장
	임 선 지	제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 환	제27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상임위원)
위원 (검사)	박 세 현	제29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 희 도	제31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김 재 춘	제28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 은 산	변시1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위원 (교수)	한 상 규	제24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혜 경	해당 없음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 (학식·경험)	양 윤 석	해당 없음	SBS 보도본부장
	백 범 석	해당 없음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2. 전문위원

【2025. 4. 27. 현재】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법원	이 재 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송 영 복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예정)
	김 지 건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판사(예정)
검찰	장 유 강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이 성 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최 익 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변호사
	김 현 아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이 준 우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연구기획부장
교수/ 전문가	최 준 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 진 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호 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류 경 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예정)
	윤 지 영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자문위원

【2025. 4. 27. 현재】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계	김 기 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정 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정 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박 혜 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와 법 연구센터장
	소 라 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언론계	권 영 철	CBS 대기자
	김 균 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김 영 화	한국일보 뉴스룸국장
시민, 사회단체	김 미 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송 란 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 경 은	국경너머인권 대표
	장 현 정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의료계	송 진 성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의사 겸 변호사)
교정기관	이 홍 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IV. 2025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1. 양형기준 설정·수정 지원 및 각종 책자 발간

가. 제10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 지원

-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 회의 및 전문위원 회의 지원, 양형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제10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을 지원
-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2025. 6. 예정)
 - 양형기준 설정 작업 시작에 따른 양형자료조사(2025. 6.~7. 예정)

나. 『2025 양형기준』 책자 발간·배포

- 『2024 양형기준』 책자 발간 이후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담은 『2025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2025. 6. 각급 법원, 검찰, 국회 등에 배포 예정

다. 『2024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2024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및 2025년도 활동계획을 담은 『2024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배포 예정

라. 『2024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I, II』 발간 및 양형위원회 보고

- 2024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 양형기준 준수 현황, 형량분포, 선고내역 등을 분석한 「2024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I, II」 책자를 2025. 12. 발간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 예정

2. 양형연구회 활성화

가. 추진방향

- 양형과 형벌, 형사재판에 관한 근본이념과 양형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연구, 공론화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
- 법원조직법이 예정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의 양형정책 연구·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2018. 7. 16. 양형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창립(現 양형연구회 회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현재 법관, 검사, 교수, 변호사 등 306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
- 양형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각계 회원들의 참여와 양형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

나. 구체적 방안

- 양형연구회 정기 세미나 개최
 - ▶ 연 2회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갈 예정(2018. 11. 1. 양형연구회 운영위원회 의결)
 - ▶ 2025. 6. 30.(월) 「심신미약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 예정
 - ▶ 2025. 12. 양형연구회 하반기 심포지엄 개최 예정
- 양형연구회 운영위원회 활성화
 - ▶ 2025. 3. 25. 운영위원회 개최
 - ▶ 양형연구회 운영계획 확정 및 연구주제 선정

다. 제14차 심포지엄 「심신미약과 양형」

- 심포지엄 일시·장소
 - ▶ 2025. 6. 30.(월) 14:00 ~ 18:00

▶ 대법원 1층 대강당

○ 심포지엄의 주제: 「심신미약과 양형」

○ 심포지엄 세부일정(예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식 전 행 사	참가자 등록	
14:00~14:10		개회식	진행: 문중흠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	1. 양형위원회 위원장 2. 양형연구회장
		장내정리	
14:10~15:50 [100분]	◆ 제1세션 「소주제: 심신미약의 규범과 현실」 사회: 최 환(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홍진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심신미약의 규범과 현실」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김연주(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문지원(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15:20~15:35 [15분]	지 정 토 론	• 이상훈(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5~15:50	플로어토론		
15:50~16:10	중간 휴식(기념촬영)		
16:10~17:50 [100분]	◆ 제2세션 「소주제: 심신미약과 양형심리」 사회: 김정환(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16:50 [40분]	주 제 발 표	• 김봉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심신미약과 양형심리」	
16:50~17:05 [15분]	지 정 토 론	• 김선화(서울가정법원 판사)	
17:05~17:20 [15분]	지 정 토 론	• 서영은(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 과장)	
17:20~17:35 [15분]	지 정 토 론	• 박초희(수원지방법원 법원조사관)	
17:35~17:50	종 합 토 론		
18:00	◆ 폐회		

3.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콘텐츠 추가 제작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당신이 판사입니다’)을 제작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한 국민들에게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범죄사실 이외에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요소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
- 2018. 1. 2. 살인, 절도범죄, 2019. 3. 11. 강제추행, 사기범죄, 2020. 2. 3. 공무집행방해, 도주치상범죄, 2021. 12. 17. 상해, 방화범죄, 2022. 12. 2. 횡령, 마약범죄, 2023. 12. 22.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2024. 12. 20. 강도상해, 무고범죄 각 오픈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 오픈에 맞추어 대법원 공식 Youtube 채널, 네이버, 카카오 등에 프로그램 홍보
 - 대법원 1층의 법원전시관에 양형체험 프로그램 키오스크 설치 ⇨ 대법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체험 및 홍보
 - 각급 법원(법정방문 학생, 배심원후보자), 언론(대법원 출입기자), 사법연수원(중·고등학생 연수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육청,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방안 모색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 제작
 - 2025년에도 사건 빈도 및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범죄군을 선정하여 제작할 예정임
 - 예상 일정
 - 3. 6.(목) ~ 4. 25.(금): 동영상 제작 대상범죄 선정 및 사건 선정
 - 4. 30.(수): 사업계획서 결재
 - 5. 14.(수) ~ 6. 24.(화): 입찰 의뢰, 입찰 공고, 입찰업체 확인
 - 7. 1.(화) ~ 7. 4.(금): 동영상 제작 제안서 평가회

- 7. 7.(월) ~ 7. 21.(월):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기술협상, 계약
- 7. 22.(화) ~ 8. 27.(수): 시나리오 작업 및 배우 확정
- 8. 27.(수) ~ 9. 12.(금): 웹페이지 업데이트 추가 제작, 계획서 결재, 계약 체결
- 8. 30.(토) ~ 9. 13.(토): 동영상 촬영
- 9. 15.(월) ~ 12. 3.(수): 동영상 및 웹페이지 작업
- 11. 17.(목) ~ 12. 3.(수): 동영상 시사회 및 웹페이지 시연회
- 12. 5.(금): 2025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웹페이지 오픈

4. 新양형기준시스템 운영

○ 개요

- 2010년 개발된 양형기준시스템의 사용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新양형기준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임
- 2025. 1. 31. 차세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으로 편입되어 운영 중임(전체메뉴 중 [양형] - [양형기준] - [양형기준 조회])

○ 시스템 개발 내용

- 사건정보 중 해당 사건명에 대한 범죄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범 죄군, 범죄유형, 적용법조, 양형기준 시행일 등이 자동으로 현출되게 하여 양형기준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
- 판결문작성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판결문 작성 편의 증대 ⇨ 양형 기준의 명시적 기재율 제고
-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판결문 검색기능 추가 ⇨ 해당사건과 동일 죄명, 동일 적용법조, 동일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사건의 판결문 검색 가능
-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법률 개정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함(양형기준

시행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 추가) ⇨ 개정 법률 내용에 대한 법정형 등 시스템에 반영

- 2025. 7. 1. 시행 예정인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시스템에 반영 중

5. 강의 및 교육

가. 양형기준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교육

- 신임(전담)법관연수, 형사재판실무연수 및 군사법원의 군판사연수, 신임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 양형자료분석관 강의 등 과정을 통해 양형기준의 취지와 내용, 적용방법 등을 교육

나. 양형기준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 교육

-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실습하는 강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6. 외국 양형위원회·사법부와의 교류 및 해외 홍보

가. 추진목적

- 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공유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위원회 대외 홍보

나. 해외 출장

- 출범 이후 매년(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기간 제외)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4~5인이 외국 양형위원회 또는 해외 사법부

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 증진

다. 영문 양형기준 책자 발간

-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양형기준 제도 발전을 위해서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우리나라 양형기준 홍보 필요
- 「2021 영문 양형기준」 책자 발간 이후 설정·수정된 양형기준을 반영한 「2026 영문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할 예정

라.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 현재 「2021 영문 양형기준」 책자를 전자책으로 형태로 수록하고, 각 범죄군의 영문 양형기준, 영문 양형기준 해설 등의 PDF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구성
- 「2026 영문 양형기준」 책자 발간 후 업데이트 예정

V. 2023년 선고 판결¹⁾ 양형기준 준수율

단위: %

범죄군	선고연도					전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강도범죄	83.4	85.7	86.0	84.0	91.4	85.8
공갈범죄	92.6	98.6	94.2	97.2	95.8	95.7
공무집행방해범죄	92.5	92.1	94.1	95.7	95.5	93.9
공문서범죄	81.5	85.1	89.7	84.3	68.3	82.0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95.2	93.6	95.7	95.5	92.1	94.4
관세범죄	-	-	-	-	33.3	33.3
교통범죄	96.2	91.1	97.4	97.5	92.9	95.0
권리행사방해범죄	90.1	90.0	94.7	96.1	92.1	92.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97.1	96.1	98.3	96.7	97.0	97.0
뇌물범죄	77.1	77.0	87.9	86.5	79.1	80.8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88.5	91.4	100.0	96.9	93.1	92.9
도주·범인은닉범죄	96.8	100.0	98.6	98.9	100.0	98.7
디지털성범죄	-	-	81.6	80.7	78.4	79.9
마약범죄	81.8	84.1	85.2	86.6	88.6	85.4
명예훼손범죄	100.0	97.2	99.0	98.9	97.7	98.3
무고범죄	95.7	97.3	96.7	96.0	94.9	96.2
방화범죄	96.7	93.5	96.0	96.3	92.6	95.0
배임수증재범죄	75.1	82.9	79.3	84.4	83.3	79.7
변호사법위반범죄	85.6	83.2	81.8	86.4	86.3	84.6
사기범죄	85.7	86.7	87.8	87.6	84.6	86.5
사문서범죄	94.9	95.3	97.3	97.1	93.9	95.8
사행성·게임물범죄	89.3	91.4	92.3	87.0	89.0	89.9
살인범죄	92.2	90.9	91.6	93.0	89.7	91.5
석유사업법위반범죄	94.4	85.7	90.0	94.1	100.0	91.7
선거범죄	80.8	88.7	85.8	89.8	72.9	81.6
성매매범죄	87.9	88.4	85.4	84.4	91.8	87.6
성범죄	86.2	86.5	89.0	89.3	87.0	87.6
손괴범죄	96.0	94.2	97.0	97.8	96.4	96.2
식품·보건범죄	77.2	71.4	85.4	68.2	78.8	76.6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70.7	81.6	92.5	91.9	83.8	84.3
업무방해범죄	90.3	90.0	94.2	91.6	94.1	91.9
위증·증거인멸범죄	89.9	86.5	91.5	94.7	91.2	90.6

1) 2024년 선고 판결은 통계 취합 중이며, 2025년 12월 무렵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책자가 발간되어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임

단위: %

범죄군	선고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100.0	93.1	92.3	99.0	96.2	95.4
장물범죄	90.1	96.4	95.7	87.2	92.3	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99.5	99.0	98.9	97.2	93.7	98.9
절도범죄	85.9	84.8	87.0	87.0	87.3	86.3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	-	-	92.6	92.6
조세범죄	95.6	90.9	94.0	95.6	93.1	93.7
주거침입범죄	-	-	92.0	95.3	93.9	94.4
증권·금융범죄	69.0	71.8	69.4	78.9	80.0	73.2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76.8	73.9	75.8	84.5	72.2	76.4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93.5	94.7	94.6	95.8	95.2	94.8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96.0	86.7	100.0	93.2	90.9	93.1
폭력범죄	98.1	98.9	98.9	99.2	98.9	98.8
환경범죄	-	-	85.7	83.2	82.7	83.3
횡령·배임범죄	94.2	93.9	93.5	93.0	95.0	94.0
전체	90.7	90.5	92.2	92.1	90.4	91.1

-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면 2019년 90.7%, 2020년 90.5%, 2021년 92.2%, 2022년 92.1%, 2023년 90.4%임
- 2023년 범죄군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도주·범인은닉범죄 및 석유사업법위반범죄(100.0%), 폭력범죄(98.9%), 명예훼손범죄(97.7%) 순으로 높았고, 관세범죄(33.3%), 공문서범죄(68.3%),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72.2%), 선거범죄(72.9%) 순으로 준수율이 낮았음
- 양형기준 준수율은 미국 연방 양형기준(전체 범죄 준수율 2020년 50.4%, 2021년 42.8%, 2022년 41.9%, 2023년 42.4%, 2024년 45.7%)²⁾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2) <https://www.ussc.gov/research/sourcebook-2024>, 66쪽

역대 양형위원회 구성(출범 시 기준, 별첨 1)

지 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위원장	김석수 前대법관, 국무총리	이규홍 前대법관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전효숙 前헌법재판관 이대법전원장	이진강 前대한변협 회장	정성진 前법무장관	김영란 前대법관, 前국민권익 위원장	김영란 前대법관, 前국민권익 위원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
위원 (법관)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구옥서 서울고법원장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윤 준 서울고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 법원장	서기석 서울고법부장	임종현 서울고법부장	여상훈 서울고법부장	이창형 서울고법부장	서태환 서울고법부장	강승준 서울고법부장	구회근 서울고법부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서기석 서울고법부장	성낙송 서울고법부장	김기정 서울고법부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박정화 서울고법부장	박정화 서울고법부장	고연금 성남지원장	권 희 안산지원장	유영근 남양주지원장
	성낙송 상임위원	김광태 상임위원	임성근 상임위원	이진만 상임위원	이규진 상임위원	천대엽 상임위원	김우수 상임위원	손철우 상임위원	신숙희 상임위원
위원 (검사)	홍경식 서울고검장	권재진 서울고검장	차동민 서울고검장	임정혁 서울고검장	김현웅 서울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주형 수원고검장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정병두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경재	서석호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태섭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	최재혁 대한변협 법제이사	한명관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회장	이재현
	조건호	조건호	이광수	이광수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곽정민 대한변협 법제이사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한영환	채근직
위원 (교수)	하태훈 고대 법대	하태훈 고대 법대	하태훈 고려대 법전문	오영근 한양대 법전문	박광민 성균관대 법전문	원혜욱 인하대 법전문	원혜욱 인하대 법전문	김혜정 영남대 법전문	강수진 고려대 법전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	조 국 서울대 법대	이상원 서울대 법전문	서보학 경희대 법전문	정현미 이대 법전문	이주원 고려대 법전문	이주원 고려대 법전문	강수진 고려대 법전문	김혜경 계명대
위원 (학식 · 경험)	신용진 MBC 보도본부장	고대영 KBS 보도국장	최금락 SBS 방송지원본부 장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남인순 한국여성 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 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이연주 한국청년 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유성희 YWCA 상임이사	차병직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차병직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한국여성 단체연합 공동대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원교수

2025년 양형위원회 예상 일정안(별첨 2)

138차 회의	5. 12.(월)	● 출범식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	--------------------



전문위원 회의	5. 26.(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군 검토
---------	-----------	--------------------



139차 회의	6. 16.(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군 확정
---------	-----------	--------------------



※ 6. 30.(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양형자료조사	6~7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	---------------------------



전문위원 회의	7. 21.(월)	● 양형기준 검토
---------	-----------	-----------



140차 회의	8. 11.(월)	● 양형기준 심의
---------	-----------	-----------

※ 9. 15.(월) 양형기준 심의(141차 회의)
 11. 7.(금) 양형위원회 회의(워크숍, 142차 회의)
 2026. 1. 12.(월) 양형위원회 회의(143차 회의)